



[산업]  
현대차  
'더 뉴 싼타페'  
신차급 틸바꿈  
08



코스피 2108.33 (+14.85)	↑	코스닥 737.97 (+3.28)
금리 (국고채 3년) 0.842 (0.000)	→	환율 (원·달러) 1203.00 (+4.40) <6.30>

# 또 터졌다, 사모펀드 사고… ‘플랫폼’도 환매 중단

〈행동주의 펀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무역 부진 영향으로 원금 회수

국내 최초 ‘주주행동주의’로 인지도 를 올린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플랫폼파트너스)이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다. 사모 펀드 환매 연기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4월 만기가 도래한 ‘플랫폼 아시아무역금융 1Y’ 2호, 3호, 4호 환매를 잇따라 연기했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환매연기 규모는 5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부진이 환매 연기의 이유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해당 펀드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무역금융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진다. 글로벌 무역량이 줄어들면서 해당 매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플랫폼파트너스 관계자는 “싱가포르 기업들의 디폴트 상태는 아니다”면서 “최근 환매 연기가 발생한 다른 운용사와는 다르게 실사를 모두 진행한 기초자산이고 부실자산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최악의 경우 펀드가 들어둔 보험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가 관건이다.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인 만큼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해 11월에도 환매 중단 사태를 겪었다. ‘플랫폼파트너스 액티브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2호’ 펀드의 환매가 일부 무기한 연기된 것.

액티브메자닌 12호 펀드의 설정액은 55억원 수준이다. 자산 대부분을 코스닥 상장사 코다코 등이 발행한 메자닌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코다코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었다. 결국 펀드 만기일인 지난해 11월 끝내 환매는 이뤄지지 못했다.

다행히 코다코는 2019년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적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재개된 상태지만 여전히 워크아웃 중이어서 회수시기를 예단할 수 없는 상태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맥쿼리인프라(MKIF) 운용사 맥쿼리자산운용이 받아가는 보수 수수료가 과도하다며 국내 첫 주주행동주의를 실시한 바 있



천안사업장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자회사인 세미스 천안사업장을 찾아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생산 공장을 둘러본 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삼성전자

다. 당시 플랫폼파트너스는 MKIF의 운용보수 인하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쌓인 신뢰를 기반으로 시장의 자금을 끌어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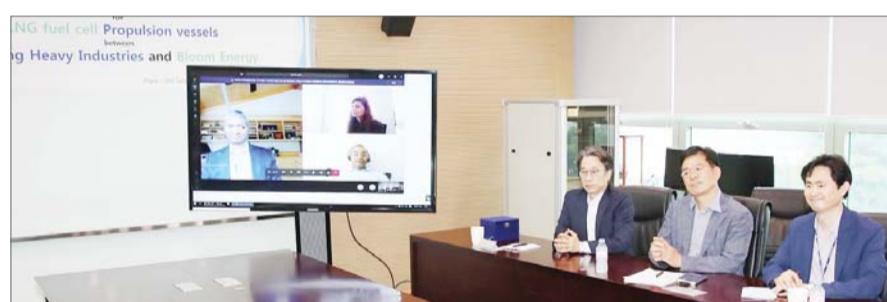
하지만 최근 두 차례 이어진 사모펀드 환매 연기 사태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가는 모양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

계자는 “국내 첫 주주행동주의로 시장의 전진한 발전에 기여하는 운용사로 각인됐으나 일련의 사모펀드 환매 연기로 신뢰 회복이 중요해졌다”면서 “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 따라 플랫폼파트너스의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파트너스는 최악의 경우 펀드가 들어둔 보험으로 투자 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5면에 계속〉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정호현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美 블룸에너지와 연료전지 선박 개발 협약 체결 기념행사를 언택트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삼성重, 연료전지 선박 개발 속도

美 블룸에너지와 공동개발 협약 미래 친환경 선박시장 선점나서

삼성중공업이 미래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료전지 적용 선박 개발에 속도를 높인다.

삼성중공업은 세계적인 연료전지 제조사인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선박용 연료전지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JDA)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정호현 삼성중공업 기술개발본부장(전무)과 스리달 블룸에너지 사장이 거제조선소와 캘리포니아 블룸에너지 본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협약 체결 기념 행사를 비대면(언택트)으로 진행했다.

삼성중공업은 세계 최초로 고체산화물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한 블룸에너지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주력 제품인 액화천연가스(LNG)선과 셔틀탱커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연료전지 핵심기술을 2022년까지 추가 확보해 미래 친환

경 선박에 대한 기술 선점을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양사는 지난해 9월 노르웨이 독일 선급인 DNV GL로부터 연료전지 적용 원유운반선에 대한 기본설계 승인을 세계 최초로 획득한 바 있다.

연료전지는 연료의 화학반응을 통해 생기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기와 같은 장치로, 전기를 저장해 사용하는 배터리와는 차이가 있다.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2025년까지 2008년 대비 30% 이상 감축하도록 강제한 국제해사기구(IMO)는 2018년 해양환경보호위원회인 MEPC 제 72차 회의에서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강력히, 그리고 조속히 시행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2030년 40%, 2050년 70%까지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 최저임금 16.4% 인상, GDP 4% 낮췄다

〈2018년 상승률〉

### 파이터치연구원 보고서

“기회평등이 결과평등 보다 경제 살리는데 더 효과적  
내년 최저임금 동결 해야”

2018년 당시 올린 최저임금 16.4%(실질 인상률 14.7%)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4% 낮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 ‘결과평등’을 추구하는 것보다 공정한 경제를 통해 모든 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는 ‘기회평등’ 정책이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조언이다.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내년 최저임금도 동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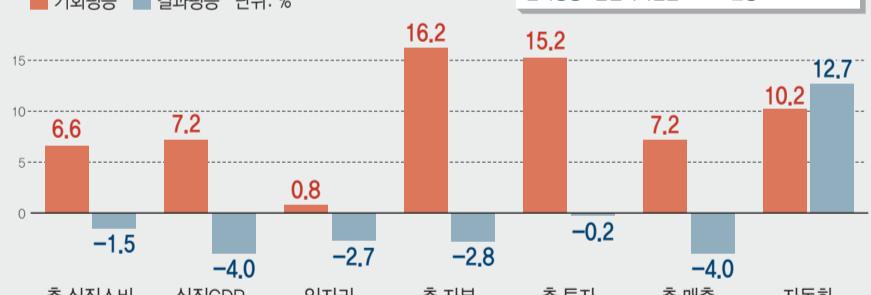
파이터치연구원이 지난 30일 내놓은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실질최저임금을 14.7% 올린 결과 실질GDP가 4%, 금액으로는 72조원 어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도 55만 개(2.7%) 사라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 인상→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반복적 단순노무 노동자 일자리 감소 및 자동화 증가→최종재 생산 감소→최종재 소비 감소 등의 파급경로 때 문이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정한 경제 생태계에 주목했다. ▲자회사를 통한 일감몰아주기(소모

### 기회평등과 결과평등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 기회평등 ■ 결과평등 단위: %



성자재 구매대행사업 등) ▲공기업 자회사의 모기업 파생사업 독식(청소 및 경비사업, 시설관리사업 등) ▲일감을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 제공 ▲플랫폼 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앱 사업 독식 등이 대표적인 기회 불평등 사례로 여기서 ‘불평등’을 제거할 경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포털회사들이 자체 심사를 거쳐 특정 언론사 기사만 ‘실시간 뉴스’ 판에 노출시켜주는 것도 불평등의 또 다른 사례로 꼽았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2018년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중간재 기업의 70%는 나머지 30%의 기업(특정기업)에 비해 기회가 4배 정도 불평등한 ‘약소기업’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들 약소기업에게 차별을 없애 동일한 기회를 주면

실질GDP는 7.2%(130조원) 상승하고, 일자리는 0.8%(17만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회불평등 제거→차별받았던 약소기업의 일자리·자본·생산 증가→약소기업수 증가→특정기업 일자리·자본·생산 감소→약소기업 생산 중간재·자동화(로봇) 증가→최종재 생산 증가→최종재 소비 증가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기업 관련 모든 경제정책을 재검토해 기회 평등 관점에서 전면 재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하되, 2022년부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 시 ‘물가 상승률+실질GDP 성장률+소득분배 조정률’을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ha@